

# 김용민브리핑

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발행처 일곱시안행블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mailto: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전통방식 속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b>알싸한흥어</b>	alssahan.co.kr
중고차 사고 할 때엔	1800-9538
<b>조광래중고차</b>	cafe.naver.com/ckrca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b>정성농장홍삼</b>	jeongseongfarm.com
안티요요! 다이어트 소꿉들은	031-783-6007
<b>비타샵</b>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뚫!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b>미공장사랑</b>	jangsarang.com
맛집 창업전문컨설팅은	010-4826-7784
<b>몬스터셰프</b>	facebook.com/monstershef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b>풍무양고기</b>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032-519-4800
<b>내피알</b>	nepr.co.kr
국가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한 다크	10월 13일 대개봉
<b>자백</b>	goo.gl/IQZiap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b>이담채김치</b>	edamche.com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010-5633-6036
<b>메이드바이어스</b>	madebyus.co.kr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b>전창걸의새싹망고차</b>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b>좋은사람과플라워</b>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b>월7천원운전자보험카페</b>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b>와우전복</b>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미술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b>연지연곰탕</b>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 대기업, 민주정부 택해야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대기업을 발목을 비틀어서 미르재단을 설립할 돈을 모았다”고 발언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말입니다.

전경련은 기겁고 즐겁게 모금한 것일까? 그렇다면 전경련이 만든 신문, 한국경제신문 김정호 수석논설위원이 비슷한 시기에 이런 칼럼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재단법인 미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한류를 넘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며 정부가 주도해 세운 조직이다. “당연히 정부 재정이 투입됐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16개 기업이 486억 원을 출연했다.” “몇몇 기업에 물었다. 미르에 왜 돈을 냈냐고. 답은 ‘내라니까 냈다’였다.” “누가 내라고 했느냐고 다시 물었다. ‘다 아시면서’라는 꼬리 없는 답이 돌아왔을 뿐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 집단의 고민이 클 것입니다. 과연 어떤 정부가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될까 하는 점에서 말입니다. 지난 20여년의 세월을 복기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권력이 뺨 뜯으려 할 때 군소리 없이 상납해야 하는 비굴함은 보수 민주 둘 중 어느 정권 때 경험했나요? 사실 민주정부 때 불편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불공정 행위에 다소간 제동이 걸렸을 테니 말입니다. 또 밀실 거래가 보수정권만큼 용이하지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게다가 다음 정부는 허구가 아닌 실질로써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더 크게 요구할 것이고, 나아가 구조 개편 요구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법과 특혜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불편한 이야기인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업자득일 테니까요. 그러나 그 체질 개선 요구가 기업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님은 기업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또 다음 정부는 심각한 경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을 것입니다. 혁신의 길로 나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치 파트너가 더 적합합니까?

새누리당을 이젠 기업들도 버려야 합니다. 차떼기, 뺨 뜯기, 겁박하기 등 저들은 자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넥타이 매고 치마를 두른 조폭일 뿐입니다. 기업의 영속과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정치권력을 만나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장에 권력이 넘어갔다고 말하면서까지 정치권력의 권능을 최소화했습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법치주의와 자유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협력하고 공존하는 길, 그 길이 답입니다.

### 오늘의 김용민브리핑

#### ■ 10월 11일(화) 1부 | 대기업, 조폭정권 대신 민주정부 택할 때

[오프닝] 특혜 반칙 위한 보수정권과의 결탁...덕만 봤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경향] '비선 측근' 차은택, 대기업 광고 싸늘이
- [한겨레] 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 단서 나왔다
- [조선·국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에 대한 극단의 평가
- [서울] 기재부 "쑥지예산, 김영란법 위반 신고할 것"
- [경향] '임시정부 계승 상징 사진' 초동 국정교과서서 뺐다
- [뉴스듣기능력평가] 중국 해적 출몰 정부 미적 대응 관련
-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 기자
- 일본 경제민간단체 만나서 한심한 이야기 늘어놓은 차
- 미국 대선 TV 2차 토론 총평...트럼프는 사실상 끝났다
- [경제의 속살] 이원배 민중소소리 기자
- 기재부 사무관 이상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는 대원외고
- 쿠팡의 총알배송, 정말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까?
- [공화국 논평] '미르 폭로' 박병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

비선의 나라

경향신문 차은택 감독, 대기업 광고 싸늘이

플레이그라운드 설립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신생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이 광고업체는 현대차그룹의 광고를 6편이나 제작했다. 플레이그라운드같은 신생중소업체가 대기업 광고를 수주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플레이그라운드의 대표는 차은택 사단으로 분류되는 김홍탁씨다. 또한 차은택 감독이 대표로 있는 아프리카픽처스는 KT의 지상파 광고 24건 가운데 6건의 제작을 맡았다. 차은택 감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있는 기업이 대기업 광고를 다수 수주한 것이다.

한겨레 창조경제 홍보에도 대기업 쥐어짜기

지난해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열린 '신바람 페스티벌'이 열렸다. 하지만 이 행사를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 관계자들을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대기업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 지역마다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대기업을 동원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에도 한화·SK·현대차·삼성 등 대기업 관계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상황과 비슷하다.

한국일보 MB정부 재단이 미르재단의 미래다

MB정부 마지막 해의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설립을 추진했다. 재단은 불과 3개월만에 출범했다. 5,000억원의 재원은 18개 국책·시중은행들이 3년 동안 각출하기로 했다. 당시에도 정권 차원의 은행 팔 비틀기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 재단 운용은 제대로 됐을까? 현재 지금의 절반인 2,000억원 가량은 은행 계좌에 묶여 있다. 재단의 주요 업무였던 보증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금융권과 재계에서는 "미르나 K스포츠재단의 미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 나온다.

나오던 놈들만 나온다더니

한겨레 예술계 '블랙리스트' 단서 나왔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회의록을 통해서다. 지난해 회의록을 보면 권영빈 당시 예술위원장이 이런 발언이 한다. "심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기금을 지원해줄 수 없는 리스트가 있다." 정부의 예술계 지원과 관련해 '윗선'에서 정치검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수가 만 명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현 정권, 20년 전으로 역사를 돌리다

국민일보 백남기 농민, 노수석 씨와 판박이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논란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사건이 있다. 바로 20년 전 시위 도중 사망한 노수석씨 사건이다. 1996년 연세대 대학생이던 노수석씨는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하며 시위에 참여했다. 당시 시위에는 6000여명의 경찰 병력이 동원돼 진압작전을 펼쳤다. 경찰의 집단 폭행이 있었고 노수석씨는 이를 피하다 결국 사망했다. 두 피해자는 모두 경찰의 국가폭력에 의해서 사망했다. 또한 국가와 유족간에 '사인'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점도 겹친다. 당시에도 국가는 노수석씨의 부검을 요구했다. 노수석씨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질병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결국 부검이 이뤄지고 노수석씨의 사인은 병사로 결론났다. 노수석씨의 아버지 노봉구씨는 "부검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했다. 국민일보가 이런 내용을 전해서 놀랐다. 그래서 소개한다.

노벨 경제학상에 대한 극단의 평가

성과연봉제 도입이나 반대, 어디에 활용될까?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올리버 하트 교수와 벤트 홀름스트롬 교수다. 하지만 이 두 경제학자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배경과 앞으로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의 해석이 있다. 조선일보와 국민일보의 보도에서도.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자. - 두 교수가 집필한 '계약이론'은 경영자 성과 연봉제의 이론적 바탕이 됐다. 하트 교수는 공공 부문의 민영화와 관련된 업적을 쌓았다. 수많은 공기업 민영화 사례를 분석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성과연봉제의 틀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일보의 해석은 전혀 다르다. 국민일보 보도 일부 소개한다. - 성과급여 즉 인센티브가 많을수록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까? 하트 교수는 꼭 그렇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기업의 성과는 시장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 단순히 성과에만 의존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운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누구 말이 맞을까.

김영란법 '활용'하는 방법

서울신문 기재부, '쪽지예산' 신고한다

기획재정부가 '쪽지예산'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쪽지예산은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의 선심성 예산을 슬쩍 끼워 넣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모든 예산을 쪽지 예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김영란 법을 추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쪽지예산은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다. 부정청탁이 아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다. 서울신문 보도, 평소 행실에 비춰보자면 쪽지예산을 건넨 야당 의원만 문제 삼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 경향신문 기장군, 전국최초 업무추진비 ‘0원’

부산 기장군은 내년도 군수 업무추진비를 0원으로 결정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자체별로 업무추진비 삭감이나 동결 움직임은 있었다. 그러나 ‘0원 편성’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경향신문 기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쓰던 금액을 ‘대한민국 청렴 일번지 기장 콜센터’의 개소 및 운영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다.

### 건설 중인 원전 역시...

## ‘서울신문 부실조사 후 건설 중인 고리 5·6기

기장군하니까 생각한다. 고리원전 1,2호기가 있는 곳 아닌가. 부근에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이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부지의 지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부지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만 조사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원전 건설 허가를 신청하면서 조사는 날림으로 한 것이다. 조사대상 부지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은 무려 39년 전 조사 결과를 사용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를 알고도 허가를 내줬다.

### 문란해진 사법질서

## 중양일보 1조 다단계 사기범도 ‘황제 접견’

중양일보가 ‘전국 교도소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현황’을 입수했다. 최근 4년동안 가장 많은 변호인 접견을 한 재소자는 주수도 전 회장이다.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있다. 총 5050번으로 하루 평균 5번의 변호인 접견을 했다. 또한 경제범죄 사범 등 10여 명도 변호인 접견을 1년에 1000번 이상 했다. 이른바 ‘황제 접견’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일보 ‘사람잡는 거짓말’ 무고 크게 늘어

악의적으로 죄를 뒤집어씌우는 무고 범죄가 늘고 있다. 무고 가운데서도 성범죄 관련 무고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일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5번 이상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신고한 경우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무고 범죄의 처벌이 약한 점을 무고 범죄의 증가 이유로 봤다.

###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태

## 東亞日報 해경, 강경대응과 외교마찰 딜레마

지난 금요일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들의 공격으로 침몰하는 초유의 사고가 일어났다. 중국 어선들은 경비함이 NL까지 접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 중국 어선이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면 해경은 작전을 포기하고 바다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날로 거세지는 중국 어선의 저항을 총기로 제압할 수는 없을까.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들은 대부분 총기 사용을 꺼린다. 규정상 대퇴부 이하를 조준해서 쏘야 하지만 흔들리는 배 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사고가 난다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는 것이다. 해경이 강경대응과 외교마찰의 딜레마에 빠졌다

## 한국일보 배가 침몰했는데 간부 늘리는 해경

해경 고속단정의 침몰사건을 계기로 현장의 인력과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대처는 이렇다. 해경본부와 지방해경본부에 간부직 네 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반면에 실무 인력은 특별한 보강 없이 조정만 이뤄져 재배치될 예정이다. 인력 증원은 내후년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중국어선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는데 해경간부들은 ‘승진 잔치’만 벌이려는 것이다

###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

## 경향신문 독재자 아버지도 이 정도는 아니었네

수 십 년 동안 교과서에 실려 있던 역사적 사진이 현재 초등 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에서 사라졌다. 사라진 사진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 사진이다. ‘대한민국 30년 8월15일’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중앙청사에 걸린 현수막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올해 광복절을 건국 68주년이라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에서 만든 교과서에도 이 사진은 실려 있다. [좌측 사진]

오늘의 칼럼

경향신문 “누가 선제공격을 결정하는가”

오늘 김용민 브리핑은 경향신문에 실린 통상전문 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의 “누가 선제공격을 결정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오늘의 칼럼으로 정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 한다’고 제5조 1항에 적고 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전쟁은 ‘자위적’ 전쟁이다. 즉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 자신을 지키는 전쟁만 가능하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머지않아 미국 본토를 핵 공격할 능력을 가지면 미국이 선제공격을 결정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보수 언론 보수 논객은 선제공격론에 열을 올린다.

그러나 선제공격 문제는 두 가지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이른바 ‘예방적’ 공격은 언제나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다. 즉 화근을 미리 없앤다는 따위의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따질 필요조차 없이 헌법과 유엔헌장 위반이다. ‘급변사태’라고 표현하면서 만일 북한에 권력관계 정변 등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 무력으로 직접 개입 공격한다면 헌법 위반이다. 둘째, 선제공격이 정당화되려면 적국이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해 공격하려고 하는 급박한 위협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정당성은 오로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만 승인된다. 그리고 급박한 위협으로 승인되려면 위협이 실재해야 하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선제공격은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이다. 그러므로 단지 북한이 미국을 핵 공격할 능력을 갖춘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을 적법하게 선제공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국이 헌법을 가진 공동체라면, 미국의 북한 공격을 당연한 것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결심하면 한국은 따라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 한국이 외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누가 위협 상황에서 선제공격을 결정하는가? 헌법은 선전포고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했다. 사후 승인이 아니다. 국회의 동의권은 사전 동의권이다. 동의가 없는 대통령의 선전포고는 위헌이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선제공격에도 적용해야 한다. 급박한 상황에 대비해서 국회의장이나 국방상임위원회의 동의권과 같은 대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급박한 위협 상황이라는 대통령의 정보 판단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국회가 미리 긴급히 점검할 대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마치 미국이 선제공격을 결정하는 주체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의 원인인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 독일은 어떻게 통일했는가? 독일의 통일 정치는 양독 사이의 신뢰이고 교류였다. 서독은 1971년 동독을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고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에서 자립과 자주권을 인정했다. 그 결실이 1989년 7만 명의 동독 국민이 일으킨 민주혁명이다. 북한을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신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사람들을 북한 사람들이 신뢰하겠는가? ”

예매율 높이면 상영관 늘어납니다

맥신 블록버스터 저널리즘  
**자백** 상영관 리스트  
2016년 10월10일 22:00기준

**서울**  
CGV강변 / CGV구로  
CGV대호로 / CGV영동역 씨네라이브러리  
CGV상암 / CGV신촌아트레온  
CGV압구정 / CGV여의도  
메가박스 강남 / 메가박스 동대문  
메가박스 목동 / 메가박스 센트럴  
메가박스 신촌 / 메가박스 코엑스  
롯데시네마 강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롯데시네마 독산 / 롯데시네마 신도림  
롯데시네마 용산 / 롯데시네마 월드컵타워  
대한극장 / 서울극장 / 아리랑시네센터  
아트나인 / 인디스페이스

**경기**  
CGV동수원 / CGV소풍 / CGV오리  
메가박스 김포 / 메가박스 남양주  
메가박스 백석 / 메가박스 안산중앙  
메가박스 일산 / 메가박스 파주금촌  
메가박스 파주출판도시 / 메가박스 하남스타필드  
롯데시네마 병점 / 롯데시네마 부천(신중동역)  
롯데시네마 부천역 / 롯데시네마 산본  
롯데시네마 센트럴(안산)  
롯데시네마 안양일번가 / 롯데시네마 주엽  
명필름아트센터 / 여주 월드시네마

**인천**  
CGV인천 / 메가박스 검단 / 메가박스 연수  
메가박스 인천논현 / 롯데시네마 부평  
영화공간주안

\* 상영관 리스트는 최종이 아니며, 12월까지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 확정된 상영관 리스트에는 예매 준비중인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신 블록버스터 저널리즘  
**자백** 상영관 리스트  
2016년 10월10일 22:00 기준

**대전**  
CGV대전 / 메가박스 대전

**충청**  
CGV안민아트포드 / 메가박스 공주  
메가박스 충주 / 롯데시네마 정주(성안길)  
청주 SFX시네마

**광주**  
CGV광주첨단 / 메가박스 광주(송정로)  
메가박스 광주상무 / 메가박스 광주하남  
메가박스 진대 / 메가박스 첨단  
롯데시네마 수원 / 광주극장

**전북**  
메가박스 송천 / 메가박스 전주(객사)  
롯데시네마 전주평화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울산**  
롯데시네마 울산성남

**강원**  
CGV원주 / 메가박스 원주

**전남**  
메가박스 목포해당 / 메가박스 신대(순천)  
메가박스 여수 / 구례자연드림시네마

**대구**  
CGV대구 / 롯데시네마 동성로 / 롯데시네마 성서  
메가박스 대구(월성로) / 동성아트홀 / 오오극장

**부산**  
CGV서면 / 메가박스 덕천 / 메가박스 부산대 / 메가박스 장산  
메가박스 해운대 / 롯데시네마 광복 /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오두 / 롯데시네마 해운대 / 극도예술관 / 아트씨어터 씨엔씨

**경북**  
CGV구미 / 메가박스 안동 / 롯데시네마 경산 / 롯데시네마 구미  
롯데시네마 구미공단 / 롯데시네마 포항 / 중앙시네마

**경남**  
메가박스 거창 / 메가박스 진주 / 롯데시네마 울산성남  
롯데시네마 진주(중앙동) / 롯데시네마 통영 / 씨네아트 리움

**제주**  
CGV제주 / 메가박스 제주

\* 상영관 리스트는 최종이 아니며, 12월까지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 확정된 상영관 리스트에는 예매 준비중인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